

석사학위논문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 다자안보협력을 바탕으로 -

2023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방 정 책 전 공

고 민 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 다자안보협력을 바탕으로 －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

－ Based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방정책전공

고민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 다자안보협력을 바탕으로 －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

－ Based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방 정 책 전 공

고 민 철

고민철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조 규 호 (인)

심 사 위 원 김 진 광 (인)

심 사 위 원 고 시 성 (인)

국 문 초 록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 다자안보협력을 바탕으로 -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방 정 책 전 공
고 민 철

08년 세계금융위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흔히 중견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두 국가 사이에서 지속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거의 국제정치를 보더라도 유일한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전국의 성장은 패권국과 도전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까지의 분쟁을 조장하였고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로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공개하였다. 국가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은 전략 경쟁 시대 속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하며 중국 등 미국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력의 경쟁적 우위 유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반면 중국은 제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강대국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최소 5년 간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간 위기를 사전에 관리하고 한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 연구의 범위는 미국이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적으로 단순히 두 국가의 패권 경쟁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한정을 둔다.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다자안보협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논문과 유사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대일로 전략, 중국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정책방향까지 분석하였다는 점,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외교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학자인 미어샤이며 교수는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음을 조언하였다. 미어샤이며 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대적하기 쉽다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 사유를 근거로 하였을 때 한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균형외교 전략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불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가입 국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나가며 유사시 집단 방위체제로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주요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다자안보협력체제, 한국의 대응전략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미·중 패권경쟁 실태	5
제 1 절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 2 절 미·중 패권경쟁의 실태	14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 3 장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분석	29
제 1 절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29
제 2 절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34
제 3 절 미국과 중국의 주요분쟁 및 갈등	37
제 4 장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국의 대응전략	44
제 1 절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사례	44
제 2 절 다자안보체제를 통한 한국의 대응전략	50
제 5 장 결 론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1

표 목 차

<표 3-1> 2021년과 2022년 정부업무보고의 대외정책 비교	36
<표 4-1> 쿼드 전략 발전 개요	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든 국가들보다 우위에 앞서게 되었고 고립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패권의 지위를 넘겨받은 미국은 소련이라는 신흥 도전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약 45년 동안 소련과의 패권경쟁을 벌여왔으며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급격하게 몰락한 소련과의 경쟁에서 끝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1979년 1월 1일 미국은 중국과 국교 수립을 단행하였다. 미국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력체제를 이어올 수 있었다.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아래 평온했던 시기는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해 많은 역량을 중동아시아에 집중시킬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30년 이상 연 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중국의 GDP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GDP를 추월하였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론이 대두되었다.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엘프리드 맥코이(Alfred McCoy) 석좌교수는 저서 『대전환』에서 “미제국이 쇠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제국은 2030년경 무너진다”고 전망하였다.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국력 차이가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보다는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¹⁾

중국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2022년 국제 정치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래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을 현상타파세력 및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미국에게 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는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과 도전 국가라고 대중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통일하였다. 이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대외정책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였으며,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서의 발표를 통해 국제적인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국가와의 협력 등 국가안보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몽이라는 강대국화 전략을 내세웠으며 2013년 시진핑 집권 이래로 일대일로, 강군몽, 신형국제관계 등을 대외정책기조로 내세우며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과거 냉전시기에서부터 자국의 세력 확장과 유지에 유리한 지역 확보를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세력에 더 많은 국가들을 합류시켜 경쟁력을 키웠으며 상대방보다 유리한 지역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이러한 경향에서 미국과 중국 또한 상대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봉쇄에 유리한 지역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며, 중국은 반접근 및 지역거부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 태평양과 만나는 한반도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

1) 이장훈. (2021).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서울 : 세창출판사, pp. 26.

다.²⁾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이다. 여태껏 우리나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안미경중을 통한 헤징전략³⁾ 등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다.⁴⁾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의 약한 동맹이기 때문에 상대하기 쉽다는 오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정치, 군사,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략적 모호성은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분석하고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단순한 안미경중에서 탈피하여 쿼드협력체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대응방안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미국이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배경, 대외정책 기조 등을 분

2) 박상민. 2021. 『미·중의 아·태지역 패권경쟁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1.

3) 중앙일보, “헤징전략” : 헤징은 원래 ‘울타리 치기’라는 뜻의 금융 용어로 현물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험 분산 전략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정치·안보 등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에도 차용되고 있다. 국제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고 걸린 이익이 높을수록 국가들이 헤징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헤징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이성적 판단이다. (15.4.9). URL :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546714>

4) 김진아. 2021.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비: 2+2 회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pp. 12.

석하였다. 문헌연구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관련 도서 등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과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실태로 다자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개념 및 특성 등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실태와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보고서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제 3장은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분석을 통해 현재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래 아시아·태평양 정책 및 대중정책을 분석하였고 다른 연구보고서에 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의 현재 정책방향에 대해서 분석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제 4장은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체제에 동참하는 방안과 한국 주도의 다자안보체제를 설립 하는 방안으로 미국과 중국에 패권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미·중 패권경쟁 실태

제 1 절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국가안보의 변화

전통적인 개념에서 국가안보란 국가 및 국민을 외부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였다. 그렇기에 국가안보는 전쟁위협이나 외부 위협세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발전해왔으며 냉전시대까지 안보의 개념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국가방위와 유사한 의미로 정의되었다.⁵⁾

냉전체제 종식 이후 기존의 대외적, 군사적 차원 중심의 전통적 안보보다는 경제, 자원, 환경, 인구문제 등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위협의 등장으로 배리 부잔(Barry Buzan)은 「국민, 국가와 공포」 저서에서 “국가중심,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환경, 사회, 정치 등 제반 요소를 포괄하고 국제적 맥락에서 안보를 확대 정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리처드 울만(Richard Ulman)은 “안보를 폭넓게 정의내리는 것은 합법적인 정책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 자원, 환경, 인구문제 등의 위협은 개별 국가가 홀로 대응하기 힘든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안보문제로 국제사회는 비전통적인 안보의 관점에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⁶⁾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의 변화는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강대국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순한 힘의 우월성으로는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다자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상호의존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레짐의 형성과 구축, 유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으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개념으로서 기존에 대두된 포괄적 안보를 비롯하여 공동안보, 협력안보 등의 개념이

5) 구준현. 201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6~10.

6) 구준현. 상계서, pp. 6~7.

제시되었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⁷⁾

2)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개념

국가는 안보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에는 크게 자국의 힘에 의존하는 방법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타국과의 동맹을 결성하여 세력균형을 이룸으로써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 전통적으로 옹호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안보 수단은 안보딜레마⁸⁾를 수반하게 되며, 19세기 말 이후 서구 강대국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과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라 국가들은 자조나 동맹체제의 한계를 넘어 다수 국가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안보협력을 모색하게 된다.⁹⁾

앞선 이유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자주의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 국제협력과 국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은 셋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특정한 원칙·규범·보편적 기준을 만드는 제도화 과정을 거쳐 국가정책과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다자주의로 보았다. 특히 코헤인은 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제도는 힘과 이해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국가가 제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협력이 용이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¹⁰⁾

7) 배정호. 200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pp. 20.

8) 네이버 지식백과, “안보딜레마”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한 국가가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행동들이 주변 국가의 안보 불안을 일으켜 인근 국가 역시 군사력 증가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도리어 안보 불안에 노출되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말한다. (2022.12.31.). URL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9586&cid=43667&categoryId=43667>

9) 신범식. 2015.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안보, 공동안 보, 협력안 보를 중심으로』,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pp. 2.

10) 김수연. 2022.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소다자안보협력 추진 동인 : 쿼드의 사

또한 존 러기(Jhon Ruggie)는 일반화된 원칙에 따라 3개국 이상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형태를 다자주의로 정의하였다. 일반화의 원칙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으며, 국가들 간에 정책을 조정하여 만들어낸 국제적 행위원칙을 의미하고 공평성과 일관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한다.¹¹⁾

제임스 카포라소(James Caporaso)는 러기가 주장하는 다자주의에 동의하여 다자주의의 주요한 특징으로 ‘일반화된 비차별성 행동원칙’을 강조하였다. 카포라소는 국가들 사이에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화 과정을 다자주의로 보았다. 국제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국제규범과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참가국들이 주권이나 국가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국제적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의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¹²⁾

현대에 들어서 다자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미부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다자안보협력을 다자주의와 협력안보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본다. 우선 다자주의는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제도주의자들은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특별한 협정이나 제도에 의해 국가 정책들을 조정하는 관행 혹은 어떠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규범을 만들면서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상호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¹³⁾ 또한 국가 간의 화해나 협력을 통하여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위기 관리, 공동 번영 등을 도모하며, 무력이나 경제 제재 따위의 강권력을 배제한 가운데 대화를 통하여 안보 현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인 협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¹⁴⁾

다자안보협력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국가 간 안보협력관계

례』, 서울 : 고려대학교, pp. 14~15.

11) 김수연. 전계논문. pp. 14~15

12) 상계논문. pp. 14~15

13) 박정근. 2019. 『다자안보체제를 통한 동북아 평화구축 방안』, 논산 : 국방대학교, pp. 6.

14) 네이버 국어사전, “다자안보협력”, (2022.8.9.) URL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878337edd554b4b873e44c5a15d0b4f>

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가운데 제도화를 이뤄가기 위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둘째, 양자적 대립과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면서 상호 간 호혜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잠재적 위협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도 다자협력의 대상으로 삼는 비 배타성을 지닌다. 넷째, 과거 안보협력의 형태와 비교하여 참여자의 수준이 다양하다. 다섯째, 과거 군사력,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논의대상 뿐만 아니라 테러, 마약, 기상이변, 지진, 자원고갈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탈 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된 안보환경과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안보이슈들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냉전시대 이전까지 빈번했던 쌍무적 협력관계로서도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초국가적인 안보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국가 간 협력증진을 통한 신뢰구축 이후 이를 토대로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자안보협력의 목적이다.¹⁵⁾

다자안보협력은 양자 군사동맹이나 다자간 집단방위 또는 집단안보체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안보협력이지만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국가들 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분쟁발생 이전에 관련국들 간의 정책 조정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¹⁶⁾

안보환경은 수시로 혹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간의 협력은 현대사회에서 중요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의 요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다자안보협력 개념의 중요성은 향후 국제정치에 있어서 더욱 부각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형태

15) 박정근. 전계서, pp. 8~9.

1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다자안보협력” (2022.8.9.), URL :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505&sitePage=1-2-1

가) 집단안보

집단안보란 한 집단 내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자국에만 의존하는 자조나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별국가의 안보를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공동 관심사로 이해하고 집단 내 평화유지와 전쟁방지를 위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국가 간의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달성되는 안보를 의미한다. 안보체제 결성에 앞서 미리 특정한 적을 상정하지 않고 한 국가에 대한 적을 자동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안보체제의 성격을 지닌다.¹⁷⁾

집단안보의 역사에 있어 국제정치학자들은 1815년 비엔나 회의 이후 유럽 협조체제에서 집단안보 구상의 원류를 찾고 있으며, 저비스는 유럽협조체제를 집단안보체제의 발생기적 양태로 규정하면서, 집단안보 구상이 근대국가체제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조직적인 규약이 부재한 비공식적인 집단안보체제였으며 집단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실현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¹⁸⁾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력균형의 정치는 많은 비판을 받게되었고 집단안보의 등장은 전쟁 후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졌다. 집단안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에 결성된 국제연맹과 1945년 10월 출범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국제연합이 있다. 국제연합의 출범 이후 발생한 6.25 전쟁의 경우 국제연합의 대표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38개국이 물리적·비물리적으로 참전하였다. 이는 집단 내 평화유지와 전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안보의 성격을 보여주며 집단안보체제가 작동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¹⁹⁾

나) 공동안보

17) 신범식, 전게서, pp. 3~4.

18) 상게서, pp. 3~4.

19) 상게서, pp. 3~4.

공동안보는 냉전 시기 핵전쟁의 위협이라는 특별한 상황과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그리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기아문제, 경제갈등,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가는 상황 하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 해결을 추구하려는 목표로부터 출현한 안보개념이다.²⁰⁾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안보의 등장은 냉전기 국제정치 상황과 깊이 관련된다. 1980년 미·소 양극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 군비경쟁이 증대되었고 환경오염, 국가 간 경제 갈등 등 비군사적 차원의 안보문제들 역시 대두되면서 냉전적인 사고로는 국가들의 안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의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은 세 개의 독립 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팔머위원회에서 제시한 팔머 보고서에서 공동안보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팔머보고서는 대립하는 안보가 아닌 함께하는 안보를 통해 국가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핵심요소로 보았다. 또한 국가 간 군사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차원에서 기아, 실업, 인플레이션 등 안보이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치하는 포괄 안보의 지향을 언급하였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안보는 한 국가의 안보를 자조나 동맹이 아니라 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전체 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집단안보와 유사하다. 하지만 비군사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집단안보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공동안보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합을 형성하였던 집단안보와 달리 물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비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국가의 협력을 요구하며 한다는 점에서 더욱 현대적인 형태의 안보레짐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²²⁾

다) 협력안보

20) 신범식, 전게서, pp. 5~7.

21) 상게서, pp. 5~7.

22) 상게서, pp. 5~7.

탈냉전 이후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의 등장, 경제의 가속화, 탈소비에트 신생독립국가의 출현 등 냉전기보다 더 복잡한 안보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레짐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 새롭게 구축된 협력안보의 개념은 각 국가의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중점을 둔다. 국가들이 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안보를 이루는 다자적 안보협력을 의미한다.²³⁾

협력안보는 협력 대상을 어느 특정 국가로만 한정시키지 않는 비배타적인 협력체의 결성을 지향하는 개방성을 지니며, 안보의 영역도 단순히 군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경제, 환경, 마약, 테러 등 위협 대상을 포괄하는 포괄안보를 지향하며 안보 협력의 방식에서는 안보협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위해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개방적, 포괄적, 점진적 방식의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²⁴⁾

이러한 협력안보의 특징은 상호공존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동안보와 유사하지만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비공격적 방어의 성격을 지닌 공동안보에 비해 타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을 방식으로 안보를 지키는 비위협적 방어를 채택함으로써 방어의 수단을 덜 제한받는 차이점이 있다. 위와 같이 협력안보는 과거의 개념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특징으로 현대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합체제들은 협력안보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과 유라시아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들 수 있다.²⁵⁾

23) 신범식. 전게서, pp. 8~10.

24) 상게서, pp. 8~10.

25) 상게서, pp. 8~10.

라) 포괄적 안보

포괄적 안보는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보유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정치·군사 분야에 더하여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안까지도 고려하여 안보를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 환경파괴의 광역화, 에너지의 전략자원화 현상으로 인해 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 요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두되었으며 안보의 의미를 국가 및 국민의 총체적 안위의 확보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은 안보의 영역을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국가가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이들과 안보와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1975년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군사, 경제, 인권을 안보 협력의 3개 테두리로 설정한 것은 포괄적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아세안지역포럼이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²⁶⁾

마) 양자안보와 다자안보

안보개념이 다양화되면서 국가들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동맹, 집단안보, 다자안보협력의 형태로 다양화되었다. 양자안보의 대표적인 형태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과 같은 양자동맹을 들 수 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안보 능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위협을 가진 국가들은 동맹을 체결한다. 동맹을 통해서 국가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 동맹국으로부터 군사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²⁷⁾

이에 반해 다자안보는 공동의 위협을 상정하지 않고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구축, 예방외교, 경제·사회·문화적 협력, 공동재난구조 등

26) 김필중, 2016.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협력 : 양자 및 다자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서울 : 연세대학교, pp. 15.

27) 상계논문, pp. 15~16.

을 하게 된다. 무력사용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화, 협력 또는 회의를 통해 비난성명을 실행한다. 다자안보의 법적근거는 합의문, 선언문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주권에 대한 개입이 없다. 따라서 양자안보보다 응집력과 구속력이 약하다.²⁸⁾

바) 소다자주의

소다주의는 다자주의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다자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모이네스 나임(Moines Naim)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나임은 참여국가의 수를 소다자주의 정의를 내리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다자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소다자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다자주의가 다자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리 부잔(Barry Buzan)은 소규모 국가들이 지역 차원에서 안보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부잔이 주장한 지역안보복합체론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국가들은 복잡한 안보 구조 속에서 상호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국가들은 각자 지닌 힘의 정도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우호와 적대의 결과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안보이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역내국가들 간의 소규모 다자간 안보협력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⁹⁾

소다자주의의 예로 노르딕 국가들의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efco, Nordic Defence Cooperation)를 볼 수 있다. 노르딕 국가들은 방위협력의 체계화를 위해 상설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구조의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노르딕방위협력기구는 낮은 단계의 소다자 안보협의체를 통해 현실적인 안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최근 미국 또한 다자간 협력이 가진 특성

28) 김필중. 전계논문, pp. 15~16.

29) 김수연. 전계논문, pp. 17~21.

상 국가들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무임승차를 막고 회원국들이 제도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다자주의를 통해 다자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은 기능주의적 다자주의로서 역내 소다자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³⁰⁾

제 2 절 미·중 패권경쟁의 실태

1) 미·중 패권경쟁의 배경

과거 강대국의 패권경쟁을 보더라도 역사상 어느 한 나라가 영원히 패권을 유지한 적은 없으며 국제정치 시스템을 바꿀 정도의 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새로이 국제체제의 지배자가 된 강대국이 자신의 의지에 합당한 국제질서를 형성했다. 이러한 패권경쟁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찾기 위해 노력했다.³¹⁾

기존 강대국과 새로이 출현한 강대국간의 힘의 구조 변동이 국제정치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가를 가장 오래전에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이다. 투키디데스는 27년 동안이나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에게 패권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에 빠진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신흥세력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으로 하여금 불확실성과 걱정을 수반시키는 것이다.³²⁾

현대에 들어 국가들의 힘의 변동과 그 힘의 변동이 국제정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론을 제시한 오건스키(Organski)는 힘의 전이 이론을 통해서 1등 국가의 국력 성장은 2, 3위 국가들보다 속도가 늦어지게 되며 결

30) 김수연. 전제논문, pp. 17~21.

31) 이춘근. 2018.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서울 : 김앤김북스, pp. 46~47.

32) 상계서. pp. 46~47.

국 패권 국가와 2, 3위권 도전자 국가의 힘이 근접하게 되는데,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도전국이 패권국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패턴처럼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³³⁾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제체제의 구조 때문에 강대국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궁극적 목표는 패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국제체제 속에서 패권적 역할을 담당해 오던 기존 강대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쟁의 핵심적 사안은 국제사회의 제도적 규범을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는 핵심 강대국들의 이익을 극대화 및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³⁴⁾

과거의 양상과 이론적인 고찰로 보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패권국을 넘겨받은 미국은 끊임없이 도전국과의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991년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소련과의 치열한 냉전을 벌여야했으며 냉전 끝에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로마의 휴일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 중동에 집중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며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중동지역 내 민주화 및 안정화 작전이 오랜 기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쟁 사상자가 48만에서 57만명에 육박하며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 등 전 영역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발휘에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³⁵⁾

또한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 주도 세계화에 중국이 핵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은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맞물리게 된다. 미국은 대내적으로 과도한 대외부채와 금융불안정성이 원인이 돼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되었고 이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난 실태가 되었다.³⁶⁾

33) 이춘근. 전게서, pp. 46~47.

34) 박상민. 전게서, pp. 6~7.

35) 김윤태. 2022. 『바이트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정책 : 국제정치이론의 적용』,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27~33.

미국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기점으로 중동에 전력을 집중하였고 대내적으로는 한 차례의 큰 금융위기를 맞음에 따라 중국의 경제·안보적 굴기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안보적 위상은 역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의식한 미국은 대전략의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미 국방 전략을 아시아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2011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포린폴리시 기고문에 소개되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상황이 나아진다면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인식하고 현실로 회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³⁷⁾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패권자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력 증대, 외교적 개입, 자유무역협상 증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을 추진한다.³⁸⁾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중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에 대한 도전을 억지하고 아시아 자원 수입 시장과 수출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정책은 협력에서 경계로 바뀐다.³⁹⁾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고 억제하려는 이유는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우려하는 측면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외교는 순조로웠으며 특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은 달러의 국제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2009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36) 공민석. 2021. 『미중 신냉전과 한국 외교전략』, 논산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pp. 1.

37) 김윤태. 전게서, pp. 27~33.

38) 상게서, pp. 27~33.

39) 풍엽. 2019. 『중국 다자외교와 미중관계 : 아시아태평양 역내 갈등관계의 고찰』, 서울 : 성균관대학교, pp. 43.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와 권위정치체제를 섞은 모델을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생각하였으며, 미국의 모델보다 좋다고 생각하였던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와 소프트 파워 차원에서 미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중국은 지역적 대화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지지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다자주의를 주장하면서 아시아 포럼을 제시하고 아세안 지역포럼을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에 있어 동아시아 전략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체제에서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넷째, 중국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25년까지 미국의 대부분 우세를 상실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고, 미국 학자 다니엘 드레즈너(Daniel W. Drezner)는 2025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굴기에 따라 세계가 다극화시대에 들어갈 것이며 이러한 구조성의 변화가 2040년대부터 글로벌 시스템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또한 2009년 미국 여론 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5개 국가 중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주도하는 슈퍼국가가 된다고 예상하는 국가가 13개 국가였다. 이러한 4가지 원인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공동협력과 공동이익에서 대립과 이익독점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였다.⁴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대중정책은 안보와 경제 다자기구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그리고 환태평양경제협력(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정책을 취했다. 군사적으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 대비하여 해·공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⁴¹⁾ 동맹국과의 군사훈련, 무기 판매나 원조 등을 통해서 비용과 정치적 저항을 줄이면서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외교적으로는 기존 동맹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과는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한 채 과거 소원했던 필리핀과의 동맹을 회복시켰으며 새롭게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

40) 풍엽. 전개논문, pp. 48~50.

41) 김윤태. 전개서, pp. 27~33.

안마까지 우방국 확대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다자적 협력체계의 핵심에는 환태평양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입장 고려를 강점으로 내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조치들은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않았다고 분석되며 오바마 정부의 대중정책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를 기점으로 점차 아시아로 회귀하기 시작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⁴²⁾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라는 개념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력 증강이고, 두 번째 목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이다. 이러한 목표의 근간에는 힘을 통한 평화가 있다. 미국의 국익 증진과 세계 평화 기여를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여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치 기간을 늘리고 중국몽을 앞세워 대외전략을 구상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신냉전을 불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앞선 핵심가치로 설명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선택한 대외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16년 아베신조가 연설을 통해 전략으로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 자유 무역 등을 추진 목표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핵심 국가인 호주도 2017년 외교백서에서 일본과 유사하게 규범에 기초한 자유 무역을 핵심 기조로 인도·태평양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7년 10월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의 인도 방문 직전 연설이다. 틸러슨 장관은 인도·

42) 풍엽, 전개논문, pp. 46.

태평양 전략을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공세적 경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⁴³⁾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일본 아베 총리와 면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처음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역, 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규범준수와 항행의 자유 등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호주, 인도를 연계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4자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며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 경제 및 군사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맞아떨어졌다.⁴⁴⁾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첫 공식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 Open Indo-Pacific)으로 명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위 보고서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정주의 세력과 경쟁상대로 규정하였으며 향후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대 전략도전 중 중국을 1위로 선정하였다.⁴⁵⁾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으로 미국은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공정한 상호 무역·규범 등에 기초한 새로운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확장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측면으로 공정하고 상호적인 역내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 상품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투명한 사회기반 시설 자금 조달 관행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군사 안보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된 미군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억지와 격퇴를 가능케 하고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방어 능력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아세안 국가와 안보 및 정보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되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43) 박원곤.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223~224.

44) 박상민. 전게서, pp.10~12.

45) 풍엽. 전게논문, pp. 50.

의 합법적인 방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였다. 미국의 중요 안보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우호관계 축진을 재차 언급하였다.⁴⁶⁾

2018년 1월 발간된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는 중국이 군 현대화와 공세적 경제 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호적인 지역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국방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럽, 중동과 함께 미군이 적대세력을 억제, 격퇴할 핵심 지역으로 상정하였으며 동맹 및 우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공세를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토록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였다.⁴⁷⁾모두에게 번영과 안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파트너들과 네트워크화된 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세를 억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공동의 영역에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⁴⁸⁾

국방전략서는 국가안보전략서와 유사하게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여 기존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경쟁력 쇠퇴를 가속화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안보환경 인식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핵심적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주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2018년 5월 미국은 아시아 지역 미군의 핵심기지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이에 따른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체제로 설정하고,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외교·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다.⁴⁹⁾

두 공식 문건이 발표된 이후 2018년 6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그

46) 풍엽. 전개논문, pp. 50.

47) 박원곤. 전개서, pp. 225~226.

48) 김태형. 202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93.

49) 상계서, pp. 93.

필라 안보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4가지 핵심 논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해상로와 해상소통 채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은 우호국의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둘째, 동맹국과 우호국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한 방어 능력을 향상한다. 셋째, 법치, 시민사회, 투명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넷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강화를 위해 사회시기반시설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투자를 증진한다. 이는 기존의 소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에 내포된 원칙과 핵심 특징 등을 강조한 것이다.⁵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019년 6월 미 국방부 보고서와 11월 미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수정세력으로 중국을 러시아, 북한, 테러와 함께 4대 핵심 도전으로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서문에서 자유와 억압의 양분된 비전을 가진 지정학에 기초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된다면 “특히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현대화된 군사력과 약탈 경제를 내세워 주변국을 강압하고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라고 명확히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며 이에 도전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천명한다.⁵¹⁾

이를 위해 준비태세, 파트너십, 지역 네트워크화 확장의 3대 노력선을 제시였다. 준비태세 차원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한국, 일본 등 역내 기존 동맹 및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인도·태평양이라는 범위와 그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나타내고 있다.⁵²⁾ 또한 이전 문서와 비교하여 중국을 국제질서 저해 및 규범을 무시하는 핵심 세력으로 규정하고, 동맹국과 우호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지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4

50) 김태형, 전게서, pp. 93.

51) 상게서, pp. 93.

52) 상게서, pp. 93.

자 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포럼으로 규정하였으며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협력 강조와 아세안 국가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였다.⁵³⁾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중국을 협력이 대상이 아닌 경쟁대상으로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표방한 반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참여국을 제한하지 않는 개념으로 소개하였지만 사실상 중국을 협력국에서 배제하고 수정주의 국가로 정의함으로써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표명하였다.⁵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갖는 의미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 전략의 핵심가치로 두고 전략을 세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명명하였으며 군사적으로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진행중인 남중국해 갈등을 경계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군사 자산들을 인접 해안으로 전진 배치시켰다. 또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새로운 파트너로 삼고 호주, 일본과 함께 4자 포위망 구성에 초석을 다져왔다고 할 수 있다.⁵⁵⁾

4)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

중국의 글로벌 부상에는 미국과 큰 연관이 있다. 첫째, 미국이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중동지역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둘째, 중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에 협조하면서 반대급부로 부시 정부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게 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셋째, 미국이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

53) 박상민. 전게서, pp. 11.

54) 박원곤. 전게서, pp. 226~227.

55) 상게서, pp. 226~227.

화가 심화되었으며 결국 2008년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침체를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우선주의 등의 정책으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약 20년 동안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전략적 기회의 시기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보듯이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⁵⁶⁾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전략경쟁은 한층 더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신중하고 소극적인 대미 도광양희(韜光養晦) 외교노선을 점차 부정하고 자신감에 찬 적극적인 분발유의(奮發有爲)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대내외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영역에서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반도체 굴기,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세웠다. 둘째,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러 간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으로 준동맹화를 추구하였으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첨단 군사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국방현대화에서 대미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추진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문화영역에서 소프트 파워 증진 등을 거론할 수 있다.⁵⁷⁾

앞서 언급한 중국의 분발유의 정책 중 일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중화민족의 위대한 증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발걸음으로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전략을 시작했다.⁵⁸⁾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당시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처음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설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일대일로는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데, 그 중 일대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하려는 육상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이며, 일로는 동남 및 서남아시아에서부터 중동과 아프리카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

56) 이현중 외. 2021.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패권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9~10.

57) 상게서. pp. 9~10.

58) 박상민. 전게서, pp. 8~9.

는 해상 기반의 실크로드이다.⁵⁹⁾

중국은 지정학적 관점으로 육상으로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해상으로는 10여 개국과 해안선을 접하는 지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륙해양 복합형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지형적 특성을 살린 고대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중국을 기점으로 육상 및 해상의 실크로드를 연결함으로써 중국이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세계에 우뚝 서고자 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⁶⁰⁾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중국 중심의 경제권과 5통(通) 정책을 활용하여 역내 주변국들과 우호협력 확대, 중국 국내문제 해결, 미국의 패권견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⁶¹⁾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이른바 5통의 세부방안으로 정책구통(정책 소통), 시설연통(인프라 연결), 무역창통(무역 소통), 자금유통(자금 교류), 민심상통(인적 교류)이 있다. 이는 중국이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미국 및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고립 상황을 탈피하고,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의 위협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미국과의 역내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연안에서 출발하여 남중국해, 서태평양, 인도양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해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해역과 상당 부분이 겹쳐

59) 이장훈. 전게서, pp. 87.

60) 서석형. 2021.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한반도의 통일 환경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pp. 8.

61) 상게서, pp. 8.

62) 상게서, pp. 8.

있고 이는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역내 주변들과의 관계를 중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⁶³⁾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 제안 이래 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국가를 방문하는 등 주변 중시의 다각적인 정상외교를 펼쳤다. 2014년 총 18개국의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2015년에는 총 10개국을 방문하고 9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총 42일간 정상외교를 펼쳤다. 그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순방 기간에는 각국과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관된 39개국의 국가원수와 관련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6년에는 5차례 출국하여 12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중 4차례가 아랍, 동유럽, 동남아 등 일대일로 전략과 일치하는 동선이었다. 이렇듯 중국 지도부의 다각적 정상외교의 결과, 2016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공식 출범 시에 57개국 참여를 이끌어냈고, 2017년 5월 기준으로 회원국은 77개국으로 증가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추동력을 확보하였다.⁶⁴⁾

일대일로 전략은 단순 물류 교역의 신시장 의미를 초월하여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의 연결과 통합으로 발전하고, 교통과 통신, 산업기반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6대 경제회랑 형성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정비까지 포함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에 해당하는 국가 인구는 44억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3%에 달하고 경제규모는 21조 달러로 세계 경제규모의 29%를 차지한다. 중국은 과거 미국과 유럽이 패권적 국제질서를 추구한 것과는 다르게 일대일로 전략 구상으로 호혜와 평등원칙, 이익공동체 이념으로 공동평화발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출범시켰고, 일대일로 사업만을 위한 4,0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도 조성했다.⁶⁵⁾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우호협력지대를 확대하는 것이

63) 서석형, 전게서, pp. 8.

64) 상게서, pp. 8.

65) 상게서, pp. 8.

다. 주변우호협력지대 확대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한 중국의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이익을 증대하여 포위망을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동아시아와는 유교사상, 남아시아와는 불교문화, 중앙아시아와는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는 끊임을 수 없는 정으로 묶여있다는 논리를 제시였다.⁶⁶⁾

시진핑 주석은 2018년 8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5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일대일로는 인류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대일로 구축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경우 거대한 중화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 최종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만큼 힘을 키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전략은 향후에도 중국의 중요한 대외정책 기조로 판단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김동우 외(2021)⁶⁸⁾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심화됨에 따라 단순한 안미경중의 헤징전략의 추구는 북핵 고도화 등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쿼드 등 미국 주도의 안보회의체 보다는 아세안 중심의 다자안전보장 체계 구성을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에 협력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네트워크화에는 첨단 디지털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동참하고 신남방정책 2PLUS 정책 구상을 공표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강구하였다.

박상민(2021)⁶⁹⁾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66) 서석형. 전게서, pp. 8.

67) 이장훈. 전게서, pp. 87.

68) 김동우 외. 2021. 『미중의 전략적 경쟁 하 적극적 헤징전략을 활용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51~54.

는 균형외교 전략이며 둘째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이고 셋째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이다.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 자료를 기회 및 위험요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최선의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네트워크 구축 핵심 협력체인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한·미·일·호·인 5개국 ‘펜타’의 모습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형수 외(2021)는⁷⁰⁾ ‘QUAD의 집단방위체제로의 발전 전망과 합의’는 약소국이 다자간 집단방위 가입 시 얻는 장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집단방위체제로 발전 가능성이 큰 QUAD PLUS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한국은 반중 연합에 동참이 아닌 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라는 입장과 명분으로 집단방위 효과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견제를 회피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압력에 끼인 아세아 국가들을 규합해 지역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연대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현중 외(2021)는⁷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된다고 분석하여 한국의 해징전략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4대 대기업이 약 44조원 규모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바탕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의 기틀 ‘안미’ 아래 중국에 경사되어 있는 ‘경중’을 한·미 간 첨단 핵심 제조업의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미’로 전환하여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해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서는 앞선 논문들의 주장과 유사하게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통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상황 속 위기관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69) 박상민, 2021. 『미·중의 아·태지역 패권경쟁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25~26.

70) 김형수 외, 2021. 『QUAD 집단방위체제로의 발전 전망과 합의』,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26~29.

71) 이현중 외, 2021.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미·중패권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pp. 24~26.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과 활동, 나아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국익의 보존, 증대에 의의를 둔다.

다만 앞선 논문들과의 차이점은 과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국몽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같은 한국식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보완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분석

제 1 절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1)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대외전략 기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와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와 ‘원칙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맹 관계도 끊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렸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고립된 미국을 다시 세계무대로 돌려놓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건과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복원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통해서 글로벌 안보환경의 양상을 평가하고 미 국가안보전략이 달성해야 할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력의 근원인 국민, 경제, 국방,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과 육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미국과 동맹으로부터 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유리한 국력 분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민주주의 동맹, 파트너십, 다자기구,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를 유지 및 주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국가안보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건을 통한 세계적 리더십 복원이다.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모슬렘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강했던 대통령 행정 명령 13769호를 취임 즉시 폐기하고 난민 수용 인원을 현재보다 8배 많은 12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회복을 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D-10(ten leading democracies) 전략포럼⁷²⁾, 쿼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 간 유대를 공공히하고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하여 강하게 규탄하고 미국 내 미얀마 자산을 동결하는 등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보이는 등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 복원을 추구하였다.⁷³⁾

둘째, 동맹 네트워크와 지구적 협치 구축을 통한 미국의 세계적 입지 강화이다. 이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제제도의 영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동맹 복원 의지 피력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구할 것이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우선적으로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을 재가입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으며 주독 미군 감축 유보 결정 등을 통해 동맹 국가들과의 신뢰 회복을 추구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서 탈퇴하거나 가입을 철회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재가입하며 미국의 세계적 입지 강화를 추진중이다.⁷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약화되었다고 평가되었던 한·미 연합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서 중국·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고 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가까이하고 있는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72) 위키백과, “D-10 전략포럼” : D-10 (ten leading democracies)은 선도적인 10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아래 민주주의 질서에 근거한 규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서양위원회가 주도한 개념을 말한다. 국가들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일본 및 EU이다. (22.12.14). URL : https://ko.wikipedia.org/wiki/D-10_%EC%A0%84%EB%9E%B5%ED%8F%AC%EB%9F%BC

73) 노인규. 2021.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 구상』,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2.

74) 상계서, pp. 2.

2)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대중정책

이전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미국이 외교 정책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쏟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국가안보전략지침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미국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인 중국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의 기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위 기고문에서 미국이 아시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과 질서를 저해하려는 중국의 도전에 미국과 동맹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과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제시하였다.⁷⁵⁾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역내 주둔을 지원한다. 또한 군사 및 정보 파트너십을 갖추도록 독려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춰야하며 역내 국가들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이 만약 자유주의 질서, 규칙에 따른다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대연합의 성격보다는 사안별로 맞춤 또는 즉석의 성격을 가진 D-10, 쿼드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커트 캠벨은 지역 내에서 세력균형을 강조하고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 등에 의한 지역 패권 형성을 방지하는 데 요점을 두었다.⁷⁶⁾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서의 공개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비전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위 전략서는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안정·회복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통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75) 이수훈,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중정책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3.

76) 상계서, pp. 3.

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역내 안정성의 담보를 위한 방향성으로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기반한 보복적·거부적 억제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래식 억제력 구축 방향을 언급하였다.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내 양자 동맹과 선도적 파트너 국가, 동남아국가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 그리고 인도·태평양 역외 국가까지 연계하는 집합적 역량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 동맹의 강화, 쿼드를 통한 역내 주요 현안 선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과의 연계성 구축, 미국·호주·영국의 신안보협의체인 오키스의 안보적 역할 강조 등이 중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⁷⁷⁾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최종목표는 대중견제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복원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할 경우 그에 걸맞는 혜택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정책과 지속적인 마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양자 동맹 강화와 같은 미국의 다자주의 전략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익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3)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

가) 한·미동맹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증대의 기대감을 지속적으

77) 강석윤, 2022. 『미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대한 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2~5.

로 높이고 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 열린 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의 성격에서 확장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그 범위를 경제,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였다. 두 국가는 핵심, 신흥 기술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⁷⁸⁾

한·미동맹의 강화는 반대로 중국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증대시킬 것이며, 중국의 시장과 공급망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온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되짚어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중립적인 태도를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나) 쿼드(QUAD)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다자협의체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개시와 맞물려 활성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쿼드를 역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합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포괄안보를 구축하고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은 그 동안 쿼드 참여에 대해 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미국은 21년 3월 한미2+2 회담을 통해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참여를 노골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태이다.⁷⁹⁾

쿼드 가입 국가 간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기술 개발 및 기술 표준, 코로나 19 대응 등의 대한 논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성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쿼드플러

78) 권보람. 2022.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 성과와 과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1~2.

79) 이수훈 외.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p. 122~126.

스(QUAD Plus)⁸⁰⁾ 협력체 형성에 대해서 이익사항을 고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된다. 다만 앞서 논의된 사항과 같이 중국의 경제적인 불이익 부여는 쿼드 가입, 활동에 대해서 큰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에 있어서 한국의 쿼드가입은 미국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권유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1) 시진핑 정부와 대미관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었고 두 국가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들을 시작하였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2021년 3월, 7월 및 10월에 각각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였고 11월 미국과 중국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영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19 등 보건안보, 기후위기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 필요성 및 북한, 이란 등 지역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⁸¹⁾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2022년 6월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며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이미지 공격, 억지 탄압 등을 중지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하며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등 4불 1무의 뜻을 미국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⁸²⁾

80) 네이버 지식백과. “쿼드플러스” :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장관이 ‘쿼드’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강화 방침(쿼드 플러스)도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2.12.14.).
URL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42141&cid=43667&categoryId=43667>

81) 김윤태. 2021. 『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22~23.

향후 전망으로 바이든·시진핑 시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경쟁 심화 속 관여 노력 유지’ 추세하에 영역 및 이슈별로 경쟁, 협력과 대결이 다양하게 분화, 중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 영역인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중첩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소통강화와 협력확대 및 이견관리를 통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관리에 대한 양국 간 이해가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권 및 안보, 발전 이익 등 소위 핵심이익의 결연한 수호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비판, 견제 및 억제에 대해 영역 및 이슈별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신장, 티벳, 홍콩, 대만과 같은 핵심이익 이슈에 있어서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⁸³⁾

2) 시진핑 정부의 글로벌 협력강화

2022년 4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는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100년 만에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변화하고 있고 중화민족의 부흥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식을 반영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중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도전이 계속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중국 중심의 다자주의와 타 국가와의 협력강화 정책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⁸⁴⁾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수축하

82) 이상국, 2022. 『2022 전반기 중국 전략동향 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4,

83) 상계서, pp. 4

84) 상계서, pp. 1~3.

고 전략의 중심을 신흥대국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전략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점차 집중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쿼드, 오키스 등의 안보협의체가 국제안보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은 핵심이익 수호, 글로벌 강대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중국은 정부업무보고 형식으로 대외안보와 국방정책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유리한 국제환경형성을 위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이익, 해외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⁸⁵⁾

이와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2022년 3월 양회 기간에 공동·포괄·협력·지속 가능한 안보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리커창 총리는 2022년 3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대외안보 정책을 공식화했다.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정책 견지, 신형 국제관계 건설 추동,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구체화 추진 등을 중요 대외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⁸⁶⁾

<표 3-1> 2021년과 2022년 정부업무보고의 대외정책 비교

2021년	2022년
·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정책 견지, 글로벌 동반자 관계의 적극 발전 ·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 · (대외)개방과 협력 견지 ·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공정,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발전 추진 · 국제와 지역 협력의 지속적인 심화	·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정책 견지 · 중단 없는 평화 발전의 길 견지 · 신형 국제관계 건설 추진 ·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구체화 추진 · 전 인류 공동체 가치의 고취

자료: 2022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pp.3) 표 재인용

중국은 글로벌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접근 노력을 강화했다. 고위층 인사들과 직접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심화했다. 중국은 아프카니스탄의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의 국가와 회의를 개

85) 이상국. 전게서, pp. 1~3.

86) 이상국. 2022. 『2022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p. 2~3.

최하고 정치외교, 대테러, 인도원조, 상호연계 등의 영역에서 아프카니스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또한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력 체결을 필두로 키리바시, 사모아 등의 순방을 통해 각국과 일대일로, 기후변화 대응 등 총 15개 영역에 걸친 52개 항목의 협력 강화를 달성하였다.⁸⁷⁾

향후 중국은 글로벌 강국 건설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글로벌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핵심이익을 공고히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양자 관계, 다양한 다자대화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우호적 상황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우호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상하이협력기구의 확장 등 지역 다자안보틀을 지속 활용하면서 주변 지역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개방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⁸⁸⁾동시에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상하이협력기구 국가 및 일대일로 참여국가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⁸⁹⁾

제 3 절 미국과 중국의 주요 분쟁 및 갈등

1)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내 난사군도 및 서사군도 해역에서 1960년대 남중국해 내 석유 부존 가능성 발표를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 및 관할권 분쟁의 가열 또는 소강상태가 반복되어왔다. 1960년대 시작된 분쟁은 1994년 유엔해양법(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발효되면서 격화되기 시작했고, 평화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단선

87) 이상국. 전게서. pp. 2~3.

88) 이상국. 2021. 『2022년 중국의 안보정세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p. 3.

89) 김윤태. 전게서, pp. 24.

이론을 주장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다.⁹⁰⁾

중국이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필리핀은 관련 문제를 2013년 1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였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어느 국가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필리핀 어선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9월 G20(Group of 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에 남중국해에서의 힘의 과시를 경고하고 국제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 해군 주도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실시하였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의 주요 분쟁이 되는 원인은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경우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¹⁾

중국이 남중국해 지배권을 확보할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구현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 핵심사항인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 및 운용하는 데 큰 원동력을 얻게 된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및 상품 수출입 통로를 확보해야한다. 남중국해는 매년 3조 달러 규모의 무역량이 통과하는 지역이며 해저에는 상당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있어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잠수함과 항공기, 수상함의 대 수상함 순항미사일, 대함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수단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항공모함킬러라고 불리는 DF-21과 DF-26 중거리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 실전 배치하였으며 2030년까지 잠수함 80척, 중국형 이지스함 40척 확보를 목표로 하여 지속 건조중에 있다.⁹²⁾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90) 김동우 외. 전제서, pp. 17~18.

91) 이장훈. (2021).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서울 : 세창출판사, pp. 142.

92) 상제서, pp. 145.

입장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경우 미국으로선 남중국해와 연결된 태평양의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법을 무시한 중국의 행동을 용인할 경우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극복하고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혁신적인 작전개념[합동방공작전(JADO, Joint Air Defense Operation), 연안작전(LOCE, Littoral Operations in a Contested Environment,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를 개발하고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수행능력을 위한 유령함대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해 500척 규모의 함정을 확보하고 기존 11척 대형 항공모함을 포함한 경항모 6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상륙함 60척과 핵잠수함 12척을 추가로 보강한다는 구상을 세워 놓았다. 미국은 군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로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조치를 내렸다.⁹³⁾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양안문제

양안관계란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의미한다.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집권과 2016년 대만의 차이잉원 집권 이후에 대만과 중국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의 독립을 부정하는 중국과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지지하게 되면서 경쟁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의 인구는 전체의 8.5%에 불과하지만

93) 이장훈. 전게서, pp. 145.

이들이 사는 면적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의 거주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건 물론 이웃국가들과 국경을 맞댄 곳이 많아 중국에 있어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대만, 홍콩,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등은 모두 핵심이익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중국은 이 핵심이익을 타협하지 않고 물리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지켜야 할 곳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대한 영토가 분할되는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과의 통일을 최대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이 의미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대만문제와 관련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면서 이른바 대만과 통일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⁹⁴⁾

중국군은 동평-11A 단거리 탄도 미사일 10발을 발사해 모의 대만 공군기지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대만 상륙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최소 6개의 해군육전대 상륙여단을 동부전구에 배치하였다. 또한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인 쟈-20을 대만에서 500km 떨어진 동부 저장성 취저우시 인근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하였다. 최근 중국 당대회가 진행되는 중인 2022년 10월 21일 군용기 22대 등을 대만 방공식별 구역으로 보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들을 보여가고 있다.⁹⁵⁾

이러한 중국의 무력시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2017년부터 대만여행법, 국방수권법, 대만보증법 등 대만에 우호적인 법률을 통과시켜 대만과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이뤄나가고 있다. 2019년 6월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며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 파트너라고 기술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대만 인식을 같이하며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각국 정상회담 간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94) 이장훈, 전계서, pp. 135.

95) 상계서, pp. 139.

미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깜짝 방문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⁹⁶⁾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대만은 중국에게 있어서 큰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대만을 요새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또한 대만은 자국의 굴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권문제

양국이 인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인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서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특정한 상황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뺏을 수는 없다. 반면 중국은 헌법에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인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인권의 개념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권이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⁹⁷⁾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 중에서 80~200만여 명을 재판 절차 없이 강제수용소에 비밀리에 구금해 왔다. 강제수용소에 감금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이슬람 신앙을 부인하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이를 거부하면 독방에 가둔 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심한 경우 물고문까지 가해왔다. 중국 정부가 신장 웨이우얼 지역의 독립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육상 거점이며 매장량 1900만t에 달하는 아연광이 발견되는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게다가 위구르족이 독립하게 되면 다른 소수민족의

96) 김동우 외. 전계서, pp. 19~20.

97) 이장훈. 전계서, pp. 123~130.

독립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선 화약고인 신장 웨이우얼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과 테러 활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하는 것이다.⁹⁸⁾

미국은 인권의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정부에 강제수용소 해체 등 위구르족 인권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미국 의회는 2020년 5월 위구르 인권정책 법원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통해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천취안궈 당서기 등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를 총괄하고 있는 개인의 자산동결 조치를 내렸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같은 해 신장 웨이우얼 지역에서 생산하는 면화, 의류, 헤어제품 등 5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다. 신장 웨이우러 지역은 세계 목화의 20%를 생산하는 곳이니만큼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와 의회의 인권법 제정에 강경하게 반발하며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법 제정 관련인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⁹⁹⁾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제재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무역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자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고율 관세부세라는 카드를 꺼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818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전기자동차, 반도체, 고성능의료기기 등의 첨

98) 이장훈. 전계서, pp. 123~130.

99) 상계서, pp. 123~130.

단기술 제품으로 중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⁰⁰⁾

트럼프 행정부 시기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한 이후 미 대선과 코로나 19 팬데믹 이슈로 인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분쟁을 넘어 5G,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으로 고조되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기술은 민군겸용기술로 첨단무기의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혁신경쟁법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핵심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¹⁰¹⁾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려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을 반도체 국산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1조 위안의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13.5%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미국의 기술 탈동조화 전략에 맞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R&D 지출을 2025년까지 매년 7%씩 증액하여 혁신형 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¹⁰²⁾

첨단산업의 육성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핵심제조업에서 중국을 배

100) 이장훈. 전계서, pp. 52.

101) 김동우 외. 전계서, pp. 21~22.

102) 상계서, pp. 21~22.

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전환을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 규범 및 표준을 동맹국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국의 대응전략

제 1 절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사례

1)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사례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심화, 한국전쟁 이후 나토는 집단방위체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 소련과 동유럽 진영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의식에서 출발한 자유주의 진영의 배타적인 다자동맹체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보를 위해 군비경쟁과 억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집단방위체제라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국제환경은 다양한 새로운 안보이슈들을 양산하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집단방위체제에서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여 갈등 예방과 위기관리, 평화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국적합동전략의 창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적용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99년 코소보전쟁에 개입하였다. 코소보지역 내 세르비아계의 인종청소가 시작되자 비세르비아계인을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 아래 전쟁을 개시, 세르비아 정권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코소보 개입은 집단안보의 차원을 넘어 협력안보를 추구해가는 기구로의 발전을 보인 것이다.¹⁰³⁾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탈냉전기 이후 과거에 적이었던 구공산권 국가들을

103) 신범식, 전게서, pp. 10~14.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러시아와의 협의회를 설립하여 폭넓은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 문제, 실패국가 문제,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 안보이슈에도 주목하여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출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 구축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⁰⁴⁾

나)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북미,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거대 안보레짐으로 정치·군사 차원, 경제·환경 차원, 인간 차원 등 모든 안보 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보레짐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는 설립 최초 역내 국가들 간의 집단방어나 집단안보의 구축이 아닌, 회원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신뢰·안보구축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공동안보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 예로 1984년 1월 유럽 신뢰구축 및 군축회의에서 13,000명 이상의 군사 활동이 있을 경우 42일 전에 알리고 참관을 받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근대국가출현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참관을 자발적으로 허용한 사례였다. 또한 1986년 11월 비엔나 회담에서는 군사안보의 문제와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 파리회담서 회원국 중 일부인 22개국이 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 조인하였다. 후속적으로 군사활동 정보교류 및 추가적 재래식무기감축 협상 등 안보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¹⁰⁵⁾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군비 감축 뿐만 아니라 군사정보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위협 요소와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공동안보레짐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탈냉전기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는 단순한 공동안보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는 안보협력체

104) 신범식, 전게서, pp. 10~14.

105) 상게서, pp. 14~17.

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에 기반한 일종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화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19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 정상회담 간 회원국들은 새 유럽을 위한 파리 헌정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전 유럽적인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았으며, 상호 존중 및 협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권,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인류 기본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안보 개념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공동안보 개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려는 시도에 그 특징이 있다.¹⁰⁶⁾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중첩성 논쟁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 증대로 인해 추동력이 약화되었고 점차 포괄적인 안보 이슈와 관련된 협력안보 개념을 수용하게 된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환경 문제, 문화유산보존,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전문가 회담을 10여 차례 개최하였으며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단순히 한 국가 차원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분쟁 방지와 위기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협력안보의 기조 속에서 2001년 테러리즘에 관한 전략, 2003년 경제와 환경 차원의 안보전략,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도출 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대응의 의지를 밝히게 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는 냉전기간 동안 동·서 양측의 군사, 안보, 경제 및 문화, 인권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동·서 간 대화를 존속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독일통일·구소련 해체·동구권의 개방, 개혁 등을 유도하여 냉전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냉전 종식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어 ‘대화체’에서 ‘기구’로 발전한 전형적인 유럽 다자안보레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¹⁰⁷⁾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의 발전과정에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소국 및 유럽 비동맹중립국(NNA, Neutral and Non-Aligned)들이 매우 활발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 내에서 미국, 구소련, 프랑스 등 강대국들 간의 의견 대립을 잘 중재함으로써 다자간

106) 신범식, 전게서, pp. 14~17.

107) 상게서, pp. 14~17.

안보협력의 장점을 부각시킨 바 있다.¹⁰⁸⁾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가 만들어낸 결과의 평가를 보아 안보협력체제를 통한 제한조치 등의 제도화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속에서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국제규범의 준수에 대한 적시적인 전적 명료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¹⁰⁹⁾

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1994년 출범한 이후 아·태지역의 최초이자 유일한 공식적 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 특별 위상을 가지며 탈냉전 이후 등장한 협력안보 개념이 아시아에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역내에서 중국, 일본, 인도 등 지역 강대국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남중국해 영토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역내 영토문제, 북핵문제, 경제와 정치 및 사회 제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안보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아·태지역의 국가들이 양자관계 이상의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1993년 7월 26차 ASEAN 각료회의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창설을 결정, 1994년 7월 첫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담을 개최하면서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27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¹¹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공식적인 목적은 공동의 이익과 관심이 달린 정치와 안보이슈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증진하며 아·태지역에서 상호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위해 공헌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건설적인 안보 환경을 만듦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안보를 확보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신뢰구축, 평화유지활동, 반테러, 비확산, 재난구조 등 12개 주제에 대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 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안보레짐으로서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정부 간의 협의 뿐만 아니라 참여국 간 민간차원의

108) 이승근. 2018.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OSCE 모델의 유용성』,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pp. 8.

109) 김진아. 전계서, pp. 12.

110) 신범식. 전계서, pp. 17~20.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Track-1 및 비정부차원의 Track-2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참여국 간 신뢰 구축에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¹¹⁾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특징으로 첫째,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안보에 관심을 가진다. 둘째, 안보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우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들 간에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는 점진적 안보협력을 도모하는데 신뢰구축(1단계)→예방외교(2단계)→분쟁해결(3단계)라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기구나 제도가 아닌 포럼으로 명명했다는 점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와 같은 신뢰구축 조치에 질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전무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안보협력은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¹¹²⁾

하지만 협력안보 개념을 구현해 나가는 안보레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들 사이에 장기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규범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¹³⁾

라) 상하이 협력기구(SCO)

2001년 6월 출범한 상하이 협력기구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이슬람 원리주의 척결을 위해 상하이 협약에 조약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안보협력체이다. 상하이 협력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보분야 협력이다. 회원국들은 국경 안정과 같은 전통 안보뿐 아니라 상하이 공약에서 등장한 테러리즘, 분리주의, 원리주의와 같은 비전통 안보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또한 회원국 간 합동군사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평화의 사명 2005, 평화의 사명 2007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극단주의, 테러리즘, 분리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

111) 신범식. 전게서, pp. 17~20.

112) 상게서, pp. 17~20.

113) 상게서, pp. 17~20.

아래 실제 전투상황을 가정하고 회원국 간의 높은 수준의 호환 및 상호작용이 실질적으로 실험된 군사훈련으로 평가받는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안보분야 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의 협력도 도모하였는데 중국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상하이 협력기구 은행 간 협의회와 상하이 협력기구 비즈니스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상하이 협력기구 내부 경제협력의 확대를 도모하였다.¹¹⁴⁾

상하이 협력기구 비교적 새로운 안보레짐으로서 협력안보체제와 유연한 준동맹적 협력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새로운 협력체의 모습이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회원국 간의 안보이슈와 관련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신뢰구축, 재래식무기 감축과 같은 급진적 수단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기존 안보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국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 협력안보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¹¹⁵⁾

마) 쿼드(QUAD)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로 2004년 동남아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쓰나미 핵심그룹을 조직한 후 2007년 고위급 회의로 발전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설립 이후 기후문제는 전통적 안보문제와 거리가 있었기에 지속성을 유지하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고 호주가 2008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협의체는 유명무실화된다. 하지만 외부적 환경이라는 변수가 ‘쓰나미’에서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대중국견제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7년 쿼드가 재소집되며 정기적인 회의를 갖게된다.¹¹⁶⁾

2019년 제 1차 쿼드 외무장관회담과 회의가 뉴욕과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자유롭고 열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노력과 쿼드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2020년에는 쿼드 군사동맹화를 적극 추진하여 쿼드 가입 4개국에 의한 합동 해군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국가 상호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의 협약을 체

114) 신범식, 전게서, pp. 20~24.

115) 상게서, pp. 20~24.

116) 반길주, 2020,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맹의 융합지정학 : 쿼드와 오키스 동맹의 합의』, 인천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pp. 42.

결하였다. 2021년에는 쿼드 국가 간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 등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실무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금 더 포괄적 안보협력체로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¹¹⁷⁾

<표 4-1> 쿼드 전략 발전 개요

2004년	· 인도양을 휩쓴 쓰나미 수습과정에서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 최초 결성
2007년	· 지역안보 현안 논의 위한 4자 고위급 회담 개최 및 해양합동훈련 시행
2017년	· ARF회의 회동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지 선언
2019년	· 제 1차 외무장관회담(뉴욕), 쿼드 방콕회의
2020년	· 제 2차 외무장관회담(도쿄), 쿼드 플러스 확대 거론
2021년	· 화상외무장관회의(2.18), 회상 정상회의(3.12), 외무장관회의(10.26)

자료 :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맹의 융합지정학 : 쿼드와 오키스 동맹의 함의 자료 재인용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성장으로 쿼드의 회의의 빈도수는 연도가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회의를 바탕으로 산출된 협의안들 또한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전략적 자원을 확대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쿼드에 가입된 기타 3개의 국가들 또한 중견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익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권 교체 이래 한·미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쿼드 플러스에 대한 한국에 참여론을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¹¹⁸⁾

제 2 절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통한 한국의 대응전략

앞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화의 장을 통한 신뢰, 안보구축 조치로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줄이고 국가 간의 군사활동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신뢰구축이 가능하다.

117) 반길주, 전계서, pp. 42.

118) 상계서, pp. 42.

셋째, 다자안보협력체제 안에서 한국과 같이 소국 및 중립국들의 활발한 활동
시 강대국 들 간의 의견 대립을 잘 중립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및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군사적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등을 계획, 진행하여 작전의 주도성,
합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장점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서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체제에 적극적 동참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체제 중 현재 우리가 가입하고 동참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은 쿼드 플러스이다. 2020년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인도
전략 동반자 포럼을 통해 베트남·한국·뉴질랜드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의 집단
안보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제2차 쿼드 외무장관회담 간에도 네트워크화된 대
중국 연합체의 구성을 표명하였으며 쿼드 플러스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였
다. 또한 유럽 및 기타 역내국가들 또한 중국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서 쿼드에
가입 혹은 기타 다자안보협력체제와의 협력을 통해서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5월 20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
아 순방 중 동맹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쿼드 회원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포함해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국과 쿼드 플러스 형식으로 협력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실용적 연합체를 형성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쿼드플러스 가입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회이
기 때문에 최근 강화되는 한·미 관계를 고려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¹¹⁹⁾

한국의 쿼드플러스 가입에 대해서 중국의 불이익을 근간으로 하여 신중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은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한다.호주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로서 규모는 약 1946억 달러에

119) 美 싱크탱크 “한국, 쿼드플러스 후보 유력”, 세계일보, 22.5.24

달하며 전체 수출의 30.6%를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중국에 경제를 상당부분 의존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1월 발표한 외교백서를 보게되면 ‘호주의 미래 안보와 번영은 현재 물에 기초한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렸고, 이를 위해 미국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라고 규명하였다. 이는 한국이 지향해야하는 모델이다.¹²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쿼드 4개국 정상이 제 3차 정상회의 간 5세대 이동통신에 관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원칙을 수립하는 등 향후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은 동맹국들과 규범과 표준을 설립하고 기타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문제, 기후변화 등 동맹관계 안에서만 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동참을 통한 국익보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2)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는 것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견제를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담긴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도전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 강화를 핵심과제로 뽑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은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형식의 추가 대화로 3각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본격적인 한미일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했다.¹²¹⁾

미국은 대중 견제 전선의 핵심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으로 보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 동맹을 지역 동맹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 소다자주의를 강화려는 움직임의 첫 스텝도 한·미·일 동맹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준

120) 이장훈. 전게서, pp. 291.

121) 김윤수. 2022. 『한국과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 전략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 한미·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 고려대학교, pp. 78~79.

대중 외교 전략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과 비용이 높은 선택을 추구하지 않는 회피 전략, 헤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미국의 외교 노선에 전적으로 호응하는 방식, 밴드웨건을 통해 중국과 철저히 각을 세웠다.¹²²⁾

일본 정부는 2021년, 2022년 3차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는 물론, 홍콩과 신장, 대만 문제, 5G 반도체 등 중국의 이른바 ‘핵심이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물론 우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외교 기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일본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어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수치로만 보면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안보영역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뚜렷하다. 이것은 경제 분야의 연관성을 떠나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미국의 패권에 편승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일 동맹을 기초로 중국을 견제하고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최대의 무역국인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견제 노선에 합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²³⁾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북아 지역 내 외교적 파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소극적 미중관계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 주도의 외교 흐름에서 멀어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맹 관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외부 위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가 한·미동맹이 유지해온 신뢰도, 충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힘들다.¹²⁴⁾

122) 김윤수. 전계논문. pp. 66~68.

123) 상계논문. pp. 66~68.

124) 상계논문. pp. 66~68.

이렇기에 우리나라 또한 일본과 같이 동맹 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강한 지원, 즉 편승 전략을 선택한다면 한·미·일은 미국을 공통분모로 하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외형상 틀을 떠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반중 동맹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외부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상호 간의 집합정체성을 상승시키고, 같은 목표를 지닌 외교 전략을 취함으로 기대되는 편익이 안보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을 넘어설 것이므로 결속력이 강화될 것이다.¹²⁵⁾

이러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미·일이 공조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중국의 경제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에는 과거에 보여줬던 외교적 모호성을 기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인 입장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논의되었던 호주, 일본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3) 한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체제 설립

한국은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 속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견 국가이다. 한국은 현재 GDP 총액 세계 10위권 내 국가로 한국을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재정적으로나 혹은 권위적으로 큰 제한사항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이 구체화 되었다. 인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역 규모를 중국의 교역 규모 수준인 2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중견국 외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신남방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 한국의 안보 영역을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¹²⁶⁾

특히 신남방정책은 안보분야에서는 남중국해에서 특정 국가가 위협이 되는

125) 김윤수. 전계논문. pp. 71~72.

126) 최재덕. 2020. 『미중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 슬라보학보, pp. 191~194.

경우 한국에 대한 전략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며 경제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 강대국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²⁷⁾.

현재는 이러한 신남방정책이 ARF와 같은 협력안보 개념으로서 존재하지만 향후 그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군사안보차원에서 연합 군사훈련 주도, 가입국 간 군사훈련참관 등을 시행하고 북대서양조약 기구, QUAD, EU 등과 협의체를 확대하여 범세계적 안보, 경제 협의체를 창출하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관점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대외정책 기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지원을 통해 신남방정책이 운영된다면 기타 중견국 및 약소국으로부터 충분한 호혜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7) 김윤수, 전계서, pp. 191~194.

제 5 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부터 발발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을 계속 올리고 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관계를 경쟁적 공존관계로 설정하고 미중 간 협력과 경쟁, 대항의 영역들 가운데 균형점을 모색하며 힘의 우위를 통해 중국을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주의질서에 편입 시 호혜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쿼드, 쿼드 플러스, D-10, Five Eyes Plus, AUKUS와 같이 미국의 우호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또한 일대일로전략, 중국몽을 기반으로 하여 SCO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의 설립, 주도적인 운영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일대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국제적 지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빌려주고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는 행위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잠수함을 대량 생산하는 등 해군력의 증대를 통한 해양전략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 한국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바로 서측으로 두고 있으며 GDP 10위 이내의 중견국가로서 동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자신들의 전략을 운용하는데 있어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우리나라의 전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쿼드플러스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자유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우호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양한 안보문제, 경제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 1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로부터 동맹 방기 위협을 최소화하고 일본과 같이 미국 편승전략을 같이 함으로써 중국의 불이익으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제 2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신남방정책과 같이 한국 주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운영하여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중견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 3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향후에도 미국이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인용한 대부분의 논문자료와 보도자료, 간행물들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고 있는 부분, 향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자국의 경제, 군사적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 정보를 통해서 불확실한 산출값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 군사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 방향으로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등이 정치, 경제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석울. (2022). 『미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대한 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공민석. (2021). 『미중 신냉전과 한국 외교전략』, 논산 : 국방대학교 국가안 전보장문제연구소.
- 구준현. (201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 권보람. (2022).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 성과와 과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김동우 외. (2021). 『미중의 전략적 경쟁 하 적극적 헤징전략을 활용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 김수연. (2022).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소다자안보협력 추진 동인 : 쿼드의 사례』, 서울 : 고려대학교
- 김윤수. (2022). 『한국과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 전략이 한미일 안보협 력체계에 미치는 영향 : 한미·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 고려대학교
- 김윤태. (2021). 『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김윤태.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정책 「국제정치이론의 적용」』,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김진아. (202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비: 2+2 회의 시사 점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김태형. (202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김필중. (2016).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협력 : 양자 및 다자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서울 : 연세대학교

- 김형수 외. (2021). 『QUAD 집단방위체제로의 발전 전망과 합의』 ,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 노인규. (2021).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 구상』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박상민. (2021). 『미·중의 아·태지역 패권경쟁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 박원근.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박정근. (2019). 『다자안보체제를 통한 동북아 평화구축 방안』 , 논산 : 국방대학교.
- 반길주. 2020.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맹의 융합지정학 : 쿼드와 오키스 동맹의 합의』 , 인천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배정호. (200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 신범식. (2015).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 서석형. (2021).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한반도의 통일 환경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 이상국. (2021). 『2022년 중국의 안보정세 전망』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이상국. (2022). 『2022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이상국. (2022). 『2022년 전반기 중국 전략동향 분석』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이수훈 외.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중정책 전망』 , 서

울 : 한국국방연구원.

이수훈 외.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정책』,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이승근. (2018).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OSCE 모델의 유용성』,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이장훈. (2021).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서울 : 세창출판사.

이춘근. (2018).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서울 : 김앤김북스.

이현중 외. (2021).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패권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논산 : 합동군사대학교

최재덕. (2020). 『미중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 슬라보학회.

풍엽. (2019). “중국 다자외교와 미중관계: 아시아태평양 역내 갈등관계의 고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2년 5월 24일

중앙일보. 2015년 4월 9일

3. 기 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검색일 : 2022.8.9.)

네이버 국어사전(검색일 : 2022.8.9.)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 : 2022.12.13.)

위키백과(검색일 : 2022.12.14.)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일 : 2022.12.14.)

ABSTRACT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 – Based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Ko, Min–Cheol

Major in Defense Polic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Based o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n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ommonly referred to as mid–sized countries, are forced to make continuous strategic cho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st international politics, the only hegemonic power did not exist, and the growth of the challenger country encouraged conflicts not only with the hegemonic power but also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extended to wars that claimed the lives of many humans, including World War I and II.

On October 12, 2022, the Biden administration releas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head of China's 20th National Congress. The main cont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Book is to define China as the only competitor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and to achiev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U.S. forces in countries that do not agree with the U.S. such as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virtually confirmed President Xi Jinping's third consecutive term through the 20th party congress, and showed its willingness to respond strongly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ucture and continue to push forward its strategy to become a global power. It can be judg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iercely for at least five y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tical and diplomatic ways to manage the crisis between the U.S. and China's hegemony competition in advance, minimize Korean losses, and further maximize Korean interests.

The scope of this paper's study is set from 2008 to the present when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ccelerated due to the narrowing of the national power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as the U.S.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countless factors, will affect it, b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it are limited to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paper is similar to the existing paper by presenting a plan to overcom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s a response strategy for Korea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However, China's policy direction can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papers in that it analyzed not only the one-to-one strategy, but also the recent policy direc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success stories.

In the past, Korea has implemented a balanced diplomatic strategy to

minimize damag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owever, against this background, Professor Meershammer, a representative scholar of aggressive realism, advised that Korea does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generate profits through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U.S. and China. Based on Professor Meershammer's opinion, pursuing "strategic ambiguity" to minimize damage from both the U.S. and China can further weaken trust from the U.S. and create a misconception that China is easy to deal with because Korea is a weak ally of the U.S.

Based on the above reasons, it is believed that Korea needs to devise a new security strategy. Therefor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tect the nation as a collective defense system in case of emergency.

【Keywor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Korea's response strategy